

주호영, 당 내홍 수습하고 지지율 극복 '쇄신 행보' 본격 시동

국민의힘 당 혁신위 공천개혁 담긴 '1호 혁신안' 발표 수해봉사 현장 '실언' 김성원 의원 징계 개시 여부 논의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지지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쇄신'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2일 정가에 따르면 주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은 국민의힘은 이날 하루 '혁신과 반성'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재형 의원)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호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천 개혁에 관련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 위원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시절 출범한 혁신위는 해산 요구에 직면했다가 주 위원장의 지원사격으로 동력을 되찾았다.

저녁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성원 의원의 수해봉사 현장 '실언'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재선의 김 의원은 주 위원장의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자신의 측근에 대해서도 공정한 절차를 밟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의제들이 대거 거론된 것도 일종의 변화를 다짐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 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주장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추진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친

기업' 성향으로 여겨지는 보수정당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최재만·이소희 비대위원은 청년과 장애인, 지방 등 입법·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선임 문제에 일제히 목소리를 낸 것도 시선을 끄는 대목이다.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특별감찰관을 공식으로 비워둔 데 대해 먼저 사과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여러 전제 조건이 따라붙긴 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며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이 공백 상태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비대위의 이런 쇄신 드라이브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해관 간 충돌에 따른 당 안팎의 잡음에서 벗어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이날도 이 전 대표가 촉발한 내홍을 두고 여론이 둘로 나뉘어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경찰 내부에서 윤해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다. 예상하던 일이지만 증언까지 나오니 황당하다"며 "경찰에 압박하는 윤해관으로 분류하는 특정 국회의원이면 여러 사람 떠오르지 않는다"고 적었다. 경찰 간부 출신이자 최근 자신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철규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오전 CBS 라디오에 나와 "그 의원 분(이철규)을 보면서 교보재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나중에 기성 정치인이 된다면 저런 식의 정치는 하지 말아야겠

다는 반면교사로 보고 있다"며 가세했다. 이 의원은 최근 김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잘라 말했다. 내년초 전대 개최 시 이 전 대표의 재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시기가 1월 말~2월 초라고 가정하더라도 후보 등록은 12월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출마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을지연습 재개와 관련해 "나라가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참 다행"이라며 "당내 내부 분란 세력들도 정리돼 대한민국이 평온해졌으면 한다"고 언급해 양측에 자중을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승남 '농협·수협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2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업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농어촌 지역에 두도록 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농업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서울특별시내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비수도권 지역에 2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내 두도록 법에 못 박은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내 두도록 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농어업인의 상당수가 거주하는 비수도권 지역이 심각한 인구감소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과 수협이 중앙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내 두도록 못 박은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조항일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과 농어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 한동훈 "기소되셨지 않느냐"

'채널A 사건' 놓고 법사위서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충돌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나, 피고인이나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여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 발언 도중에 돌연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라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지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희근 "김순호 경찰국장 보직변경 행안부 의사가 중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밀정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보직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행안부 의사가 중요해 기다리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그쪽(행안부)에 (김 국장을) 파견했기에 파견받은 기관의 의사가 중요하다"라며 "최초 의혹이 제기된 후 국회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반드시 바뀌어야겠다는 정도의 추가 사실이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징계 절차는 남았지만, 나머지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류 총경은 감찰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기자회견만 하고 조사는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시민감찰위원회란 게 있고, 그다음 징계위원회 절차가 남았는데 최대한 본인이 소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참석자 전원은 직무명령(해산)이 전달 안 된 것으로 확인돼 불분명한 게 맞다는 감사관실의 견의가 있었고 그 의견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법무부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서는 "최초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의견도 큰 방향으로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돼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매매 합니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2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